

“당 운명 걸렸다”...여야,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에 ‘사활’

‘총선 전초전’ D-6...지역발전론 대 정권심판론 격돌 김기현·이재명 맞대결 첫 선거...지도부 총출동 지원

오는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강서구에 호남·충청 출신이 대거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당은 이들 지역 출신 정치인을 중심으로 한판 승부를 준비하고 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진교훈·국민의힘 김태우·정의당 권수정·진보당 권해인·녹색당 김유리·우리공화당 이명호·자유통합당 고영일(이상 기호순) 등 7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강서구는 전국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지만, 이번 선거는 단순한 기초 지자체장 선거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6개월여 앞두고 치러지면서, 선거 결과가 수도권 민심을 어느 정도 가늠해볼 풍향계가 될 수 있어서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지도부와 민주당 이재명 지도부가 맞대결하는 첫 선거이기도 하다. 결과에 따라 각 당 지도부 리더십이 영향을 받거나 당 쇄신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만은 없다.

다만 이 지역이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번 선거 결과를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는 이견도 있다.

실제로 강서구는 갑·을·병 지역구 모두 현역 국회의원이 민주당 소속이고, 지난 대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46.97%)보다 이재명 후보(49.17%)에게 더 많은 표를 줬다.

강서구청장 선거 역시 작년에는 국민의힘이 이겼지만, 대선 승리 직후인 점이 적지 않게 작용했다. 이전 세 차례 지방선거에서는 내리 민주당이 이겼다. 민주당은 현역 의원 3명이 모두 자리 잡고 있는 ‘텃밭’ 강서 선거를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본다.

반면, 국민의힘으로서도 강서는 포기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역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강서 지역구 3개 중 1개라도 확보할 경우 서울에서 두 자릿수 의석을 확보한 전례가 있다.

19대와 20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소속이던 김성태 전 의원이 강서에서 당선됐고, 당은 서울에서 각각 16석과 12석을 가져갔다. 민주당 계열(19대 30석, 20대 35석) 정당에는 졌지만, 새누리

당이 10석 이상을 확보한 것이다.

반면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강서갑·을·병에서 전패했고, 서울 의석은 한 자릿수인 8석(민주당 41석)에 그쳤다.

이처럼 서울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는 강서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 사활을 걸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7일 경선으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후보로 세웠다.

김 후보는 이번 보선 원인 제공자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이던 김 후보는 2018년 말 특감반 관련 의혹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지난 5월 형이 확정돼 구형장직을 상실했고, 광복절에 특별사면·복권됐다.

국민의힘은 ‘조국 사태’ 신호탄을 쏜 공익신고자 김 후보가 김명수 사법부의 편향된 판결에 억울하게 희생당했다고 판단, 다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후보가 당선돼 정부·여당의 전폭적 지원 속에 지역 숙원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이뤄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정쟁이 아닌 민생 안정을 위해선 업무 연속성이 있고, 짧은 기간 성과도 낸 김 후보가 적임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선대위 상임고문에 권영세·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명예 공동선대위원장에 총정 출신 5선 정우택·정진석 의원, 공동선대위원장에 강서 지역 민심에 밝은 김성태·구상찬 전 의원을 위촉해 총력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2주 가량 이른 지난달 4일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후보로 전략 공천했다. 경찰대 졸업 후 경찰청 정보국장, 전라북도경찰청장 등을 거쳐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경찰청 차장을 지낸 김 후보의 확장성과 도덕성을 앞세워 ‘판결문’에 잉크도 안 바른 범죄자’ 김 후보를 누르겠다는 포석이다.

윤석열 정권을 향해 ‘검찰 독재’라고 날을 세웠던 민주당이 검찰 출신인 김 후보에 대해 경찰 출신 후보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도 풀이된다.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도 강조하고 있다. 정권 실정과 폭주를 심판하기 위해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논리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재향군인회 창설 제71주년 기념식 및 전국 읍·면·동회장 안보 결의대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가짜 평화론 활개...우리 안보 안팎으로 위협 받아”

재향군인회 71주년 기념식 축하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안보리 대북 제재를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 남침 억지력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 종전 선언을 해야 한다. 대북 정찰 자산을 축소 운영하고 한미연합 방위 훈련을 하지 않아야 평화가 보장된다. ‘가짜평화론’이 지금 활개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재향군인회 창설 제71주년 기념식 및 전국 읍·면·동회장 총력안보 결의대회’ 현장 축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 안보가 안팎으로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선동이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여러분이 이 나

라를 지켜내야 한다”고 향군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재향군인회 창설 70주년 행사에 협찬 대통령으로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참석한 데 이어 2년 연속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북핵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격상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했다”며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히 수호하고 국민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재향군인회는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의 보루로서 그 역할과 소명을 다해달라”며 “회원 여러분들도 안보 의식 강화와 총력안보 태세 확립에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축사를 마무리하면서도 “전국 곳곳에서 활약하

고 계시는 재향군인회 회원 여러분, 올바른 역사관과 책임 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으로 자유,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가자”고 재차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축하하는 동안 현장에서는 10차례 가까이 박수가 나왔다.

이번 행사는 안보의식 확산과 향군의 조직 활성화 사례를 공유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수호, 한미동맹 강화 지지 등을 위한 회원들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기념식에는 신상태 향군회장과 정부에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국회에서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대통령실에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호 안보실 1차장,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한총리, 다음 중응원 여론 조작 의혹에 범부처 TF 구성 지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포털 ‘다음’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페이지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긴급 현안 보고를 받은 뒤 “방통위를 중심으로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TF를 시급히 구성하라”고 지시했다고 국무조정실이 전했다.

한 총리는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재앙”이라며 “과거 ‘드루킹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범부처 TF를 신속하게 꾸려 가짜뉴스 방지 의무를 포함한 입법 대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1일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한국과 중국의 8강전 당시 다음 응원 페이지에서는 중국팀을 클릭해 응원한 비율이 한때 전체의 91%에 달해 논란이 일었다. /연합뉴스

국힘 토론회 “민영방송 재허가 기준 완화해야”

“공영방송과 차별화 필요”

국민의힘이 4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민영방송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영방송과 차별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정성적 평가 항목들을 수정·보완함으로써 넷플릭스 등 글

로벌 OTT(동영상 스트리밍) 사업자와 겨룰 경쟁력을 확보하고 역차별을 겪지 않게끔 하자는 취지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과 한국방송학회는 이날 국회에서 ‘민영방송 재허가 제도 개선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윤 의원은 “유튜브, OTT 등 새 미디어 등장으로 환경이 급변하는데도(2000년에 도입된) 재허

가·재승인 규제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맞게 변화하지 않았다”며 “2010년 43개 방송사를 심사하며 제시한 재승인 조건은 12건이었는데, 2020년엔 심사 대상 방송사가 28개로 줄었음에도 조건은 32건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중 상당수가 명확하지 않거나 법적 근거 없고 일부는 방송사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며 “규제는 최소화하고 사업자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제23회 곡성·상곡
어린이 대축제
아이에게 선물하는 특별한 하루
2023. 10. 6. 금 - 10. 9. 월
곡성·삼진강기차마을

- 6일 캐리와 꼬마친구들
- 7일 반짝반짝 달님이
- 8일 브레드 이발소
- 9일 애니메이션 OST 콘서트